

자동차 업계 위기 극복에 3조 투입... 금융·세제 지원 총력

정부, 15조 규모 금융 지원 확대
1조 규모 프로그램으로 협력사 대출
내수진작·수출 다변화로 산업 강화

미국 정부의 25%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3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 정부의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82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에 달한다.

특히, 2만여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 부담에다 수출 위축에 따른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6%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사업장 철수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가 발표된 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업계 경영위기 지원에 3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동차산업 정책 금융을 기존 13조원에 2조원을 추가해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관세 파급력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

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는 한편,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수출 물량 감소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수 수요 진작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30~80%까지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진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를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3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과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는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연구개발 등에 올

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미래 자동차산업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3분기엔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추산은 어렵지만 우리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트럼프 대화로 한미협상 급물살... 관건은 관세 하향의 반대급부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안보 협력 논의
25% 상호관세 인하 협상 나설 계획
무역흑자 감축·LNG 수입 방안 모색

정부가 간밤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선상으로 환담하고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을 기해 발효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상당히 오래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가 성사됐다"며 "통화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뉴스시

그는 "권한대행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안보협력, 대북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또 "권한대행은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상통화라는 부담이 있었기에 앞부분은 통역을 쓰다가 뒷부분은 그냥 영어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뷰티풀 잉글리시(아름다운 영어)'라고 하면서 (통화 도중 상당부분을)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미 통상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SNS(사회

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엄청난 지속 불가능한 (대미) 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썼다.

그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 방위비를 관세 문제와 엮을 가능성이 짙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유선상 논의의 수위에 대해 "정상 간 대화이기에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만든 것을 왜곡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LNG·조선·무

역균형 등 3대 부문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 관건인 만큼 미국산 LNG의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것이라 예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관세율 25%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무역 흑자 폭을 줄여 나가는 대가로 관세율 하향 조정을 얻어내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은) 관세율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핵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DB, 韓 경제성장 올해·내년 모두 1%대 전망

12월 2.0% 전망서 0.5%p 하향 조정
고금리, 정치 등 불확실성에 소비 약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내렸다. ADB는 내년에도 2% 미만을 예측했다.

ADB는 9일 발표한 '2025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을 종전(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5% 포인트(p) 하향 조정한 1.5%로 제시했다.

하향조정 이유로는 ADB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의 하방요인"을 들었다.

다만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

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1.9%)은 올해보다 나올 것으로 봤으나 여전히 2% 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 끌어내리기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각각 2.0%, 1.6%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IMF

와 같은 수치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망을 1.5%로 하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 한국은행은 1.5%의 GDP 증가를 각각 예상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지난 전망보다 0.1%p 내린 1.9%를 내놨다. 국제유가 하락을 비롯해 식료품·에너지가격의 안정세 등을 하향조정 원인으로 들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올린 4.9%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미국의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태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 내년은 2.2%를 전망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ADB는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